

# 주간 통일정세

2015-24

## Contents

###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정부 성명 발표…남북 당국간 대화 용의(6/15, 연합뉴스)
  - 북한은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북남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 당국간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함.
  - 북한 정부는 남한 당국에 먼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자며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려는 ‘국제공조’ 놀음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체제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과 야합하여 벌리는 북침 전쟁연습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요구함.
  
- 북한 “남한, 관계회복 원하면 ‘정부 성명’ 호응해야”(6/15, 조선중앙TV)
  - 15일 오후 조선중앙TV는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기념 중앙보고회’를 방영함.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고자로 나서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발표한 ‘공화국 정부 성명’과 관련해 남한 정부가 관계회복을 원하면 이에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함.
  - 보고회에는 양 부위원장 외에 김양건 노동당 비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장,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등이 참석함.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정부 성명’ 후 대남 비난 수위 조절(6/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우리 민족끼리는 조국통일 위업 실현의 불멸의 기치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남측 당국에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남측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측의 노력에 도전하고 있다며 대북정책인 ‘신뢰프로세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대박’ 발언을 비난했지만, 박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남측 정부를 ‘괴뢰당국’, ‘괴뢰역적패당’ 등 우회적으로 거론함.

■ “북한 ‘정부 성명’은 남한에 내미는 화해의 손길”(6/16, 조선신보)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6일 ‘공화국 정부 성명:6·15에 즈음한 대범한 손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이 15일 발표한 ‘정부 성명’은 “남측 당국에 내미는 화해의 손길”이라고 설명함.
- 신문은 “북측에서는 국방위원회, 외무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여러 기관이 성명, 담화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하고 “공화국 정부 성명은 그것들과 권위가 무게가 다르다”고 강조함.

■ 북한 “미국 중·일 영토분쟁에 남한 개입 요구”(6/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사대 매국이 초래하는 수치와 굴종’이란 글에서 “남조선 당국이 미국 상진으로부터 주변 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몰이군 노릇을 강요 당하고 있다”고 우려함.
- 북한은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한조박의 이성이나 자존심이 있다면 사대와 굴종으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과거와 결별해야 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남측에 주문함.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北, 억류 중인 우리 국민 2명 오늘 판문점 통해 송환(6/15, 연합뉴스; 6/17,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5일 조선적십자 중앙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통해 17일 우리 국민 2명을 돌려보내겠다고 밝히고, 17일 오전 10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 2명을 송환한 내용을 연합뉴스가 보도함.

- 송환 대상자는 북·중 접경지역 여행 중 실종 신고가 됐던 이모(59·남)씨와 진모(51·여)씨이라고 뉴스는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남한 국민 2명의 입북이 ‘불법 국경출입행위’라며 “공화국 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행위로 응당 법대로 처리돼야 하지만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송환 결정 배경에 대해 “본인들이 고의로 저지른 범죄행위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고 강조함.
- 울릉도 근해서 구조한 北선박·선원 5명 송환 완료(6/1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정부가 울릉도 근해에서 표류하다 우리 측에 구조된 북한 선박과 선원 5명을 18일 오전 11시께 동해 북방한계선(NLL) 선상에서 북측으로 송환했다고 통일부가 밝힌 내용을 보도함.

##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마. 남북 경제 관계

- 北, 메르스 발생지역 왕래 인원 개성공단 출입제한 요청(6/15, 연합뉴스)
  - 15일 통일부가 북한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지역을 왕래한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해달라고 남측에 요청했다고 밝힌 내용을 연합뉴스가 보도함.
- 개성공단 임금 3개월째 비정상 지급…남북접촉 ‘깜깜’(6/21, 연합뉴스)
  -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남북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이 3개월째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함.
  -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21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대부분 5월분

임금지급 마감시한인 20일까지 북한 근로자 임금을 기존 최저임금(월 70.35달러) 기준으로 납부했다"고 밝혔다고 뉴스는 전함.

- 남북이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3~5월분 임금이 일단 종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납부된 것이라고 뉴스는 덧붙임.

## 바. 남북 사회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北, “북남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 즈음 ‘남북관계 국면전환 시사, 정부 성명(6.15)’ 발표 (6.15, 중앙방송·중앙통신)
- 우리 정부의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부정’ 비난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동족의 노력에 호응해야 한다’고 주장(6.18, 중앙방송)
-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북남관계의 파국적 사태를 수습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도’라며 ‘南당국은 기만적인 대화 간판을 내걸고 내외여론을 오도하지 말고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 (6.20, 노동신문)
-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블링큰 美 국무부 부장관과의 면담에서의 대북발언(북핵문제, 대북압박 더욱 강화) 관련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적 망동’이라며 ‘지금과 같이 외세와 공조하여 정치군사적 대결망동을 계속 강행한다면 북남사이에 대화와 관계개선이 언제가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비난(6.20, 노동신문)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핵 억제력 강화는 합법적 권리”(6/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핵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은 응당하고도 정정당당한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함.
  - 논평은 미국이 지난 1월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북 핵실험의 임시 중지 교환에 대한 제안을 거절한 것을 상기하며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전쟁억제력 강화의 길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함.
  - 논평은 “핵 억제력 강화만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막으며 세계평화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함.

##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미국

- 미 국무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안해…7년째 제외(6/20,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지난해 말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라는 미 의회 일각의 압박에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전함.
  - 국무부 보고서 기준으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2008년 10월 북·미 간 핵프로그램 검증 합의 직후 명단에서 빠진 이래 7년째임.
  -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현재 미 국무부가 규정하는 테러행위의 핵심요건은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고 ‘인명에 대한 위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소니 해킹사건의 경우 이를 전통적 개념의 테러행위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마. 대중국

- 北외무상 아프리카 순방길 베이징 경유…북중 접촉가능성(6/18,교도통신)
  - 교도통신은 18일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베이징에 수일간 머물 예정이고 그 사이에 중국 고위당국자와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보도함.

##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 사. 대러시아

- 크렘린궁, 김정은 9월 러시아 방문설 부인(6/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9월 초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중국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크렘린궁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보도함.
- 북한, 러시아 파르티잔스크시에 책 기증…‘친밀함’ 과시(6/18,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지난 11일 러시아 연해주 동부 파르티잔스크 시에 도서를 기증했다고 보도함.
  - 방송은 기증식은 파르티잔스크 시 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됐으며 시의회, 행정부, 중앙도서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고 전함.
  - 방송은 기증된 도서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노작과 북한의 역사·문화 관련 서적들이며 지금 북한의 모습을 담은 화첩도 포함됐다고 전함.

## 아. 국제기구

-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23일 개소(6/19, 연합뉴스)
  - 19일 연합뉴스는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가 오는 23일 문을 연다고 보도함.
  - 사무소는 앞으로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책임 규명을 보장하며 관련 사안을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뉴스는 전함.

## 자. 기타 국가

- ‘불법무기 거래’ 北청천강호 선장 파나마서 징역 12년(6/15, AP통신)
  - 파나마 고등법원은 2013년 7월 지대공 미사일 체계, 미그-21 전투기 2대 등 신고하지 않은 무기 240t을 설탕 1만 아래에 숨겨 청천강호에 실은 뒤 파나마 운하를 지나다가 적발돼 불법 무기거래 혐의로 기소된 청천강호의 선장 리영일 씨와 선원 홍영현 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함.

- ‘北-폴란드 외무성間 협조에 관한 의정서’, 6월 15일 평양에서 조인(北 공석웅 부상↔크쥐슈토프 체벤 주북 폴란드 대사 서명) 보도(6.15, 중앙통신·중앙방송)
- 주북 영국 대사(마이클 존 기포드), 6월 15일 ‘自國 국경절(여왕 생일)’ 즈음 공석웅(외무성 부상)·리광근(대외경제성 부상)·손광호(체육성 부상) 등 초대한 가운데 연회 개최(6.15,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대표단(단장 : 박명국 외무성 부상), 6월 15일 말레이시아(아세안지역연단 고위일꾼회의 참가)에서 귀환(6.15,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의 對北발언(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북조선) 관련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궤변”이라며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를 바라고 관계 개선할 용의가 있다면 대조선적대시정책부터 버려야 한다’고 주장(6.16, 중앙통신·노동신문)
- 일본의 군사력증강(조기경보기, 신형수송기 등 구입계약과 향후 10년 동안의 우주기본계획 발표 등) 관련 ‘日 군국주의는 완전히 재생되었고 재무장되고 있다’며 ‘패망의 역사를 망각하고 재침야망의 불장난질을 하려한다면 파국적 재난과 멸망이 차례질 것’이라고 주장(6.16, 중앙통신·노동신문)

- 美공군의 레이저무기 개발에 대해 ‘세계를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기 위한 군사적 망동’이라며 ‘미국이야말로 세계제패 야망실현을 위해서라면 인류를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는 것도 서슴지 않는 평화의 파괴자, 인류의 원수’라고 비난(6.17,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폴란드, 6월 17일 ‘과학·교육·문화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조인(6.17, 중앙통신·중앙방송)
- 강석주(당중앙위 비서), 6월 17일 주북 러시아 대사(알렉산드르 마체고라)와 담화(6.17,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정부대표단(단장 : 리수용 외무상), 6월 18일 아프리카 국가들 방문차 평양 출발(6.18, 중앙통신·중앙방송)
- 日 우익정객들의 ‘일본군 성노예피해자들 모독과 역사왜곡 망언(돈을 바라고 매춘부들이 한 자발적인 행위 등) 등에 “빠뜨려진 윤리관, 역사관에 물젖어있는 한 일본은 더욱 국제적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6.18, 중앙통신)
- ‘우리(北)의 핵타격 수단은 소형화·다종화 단계에 들어선지 오래이며 장거리로켓의 정밀화·지능화도 최상의 명중확률을 담보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섰다’며 ‘미국은 저들의 땅에 불소나기가 언제 쏟아져 내릴지 몰라 전전긍긍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6.20, 중앙방송·노동신문)
- 미국의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관련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해 운운하면서 남조선을 생화학전 실험 마당으로 삼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대량살육무기 개발과 전파의 원흉”이라고 비난(6.21, 중앙통신)
-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전보장관련법 개정 정당화에 대해 “집단적자위권 행사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며 ‘일본의 해외침략은 곧 망국과 파멸의 길’이라고 경고(6.21,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3. 대내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신형 함대함미사일 발사 훈련…김정은 참관(6/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동지께서 최첨단 수준에서 개발 완성돼 인민군 해군부대들에 실전 배비(배치)되는 신형 반(反)함선(대함) 로켓 발사 훈련을 보셨다”며 발사 훈련이 해군 제597연합부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오늘 훈련을 통해 인민군 해군 부대들에 실전 배비된 신형 반함선 로켓의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됐다”며 “해군의 해상작전능력은 이를 계기로 비약적으로 강화됐다”고 강조함.

- 북한 김정은, ‘대화 제의’ 직후 야간군사연습 참관(6/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동지께서 해군함선 구분대와 지상포병 구분대들의 야간 해상 화력타격연습을 보셨다”고 전함.
  - 김정은 黨 제1비서는 연습을 지켜보며 ‘실시간 해상감시 및 화력지휘체계’를 개발한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관련 연구사들을 치하했다고 통신은 전함.
  - 16일 김정은 黨 제1비서의 타격연습 참관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럽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박정천 부총참모장, 홍영철 당 기계공업부 부부장이 수행했고, 현지에서는 리영길 총참모장, 윤영식 총참모부 포병국장, 김금철 제10군단장, 리영남 10군단 정치위원, 진철수 동해함대장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영접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정일에 이은 김정은의 각별한 ‘축구 사랑’(6/1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6일 김정일 黨 제1비서가 지난 2011년부터 축구 인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고자 전국 각급 학교에 ‘축구반’을 설치하도록 했다고 보도함.
  
- 북한, 대남·해외 공작과 사이버전 강화할 듯(6/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 제1차 정찰일꾼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고 보도함.
  - 김정은 黨 제1비서는 기념사진 촬영 현장에서 “제1차 정찰일꾼대회는 격전 전야의 참여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정찰정보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데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함.
  - 18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리영길 총참모장, 럽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김락준이 수행함.
  
- 북한 김정은, 고사포병 사격경기 참관(6/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호위사령부인 제963대연합부대와 3군단으로 알려진 제526대연합부대 산하 고사포병 중대, 고사포병 군관학교 교원과 학생으로 편성된 중대들이 참가한 고사포병 사격경기를 참관했다고 보도함.
  - 18일 최룡해 당 비서, 오일정 당 부장이 수행했으며 현장에서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이 영접했다고 통신은 전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박영식, 군 서열 '2위' 확인...인민무력부장 임명 사실인 듯(6/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2차 군단예술선전대 경연에서 당선된 제526군부대, 제762군부대, 제534군부대, 제380군부대의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소식을 전하면서 수행간부인 박영식 대장을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다음에 호명함.
  - 통신은 박영식에 뒤이어 리영길 총참모장, 림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박정천 부총참모장 등의 순으로 소개함.
- 북한TV, 숙청된 현영철·변인선 또 방영(6/16,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가 16일 오후 방송한 노래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와 '혁명무력은 원수님 영도만 받든다'의 배경 화면에 현영철 부장과 변인선 국장이 각각 등장함.

## 다. 공식 행사

- 북한, 지방의회 대의원 선거위원회 조직(6/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16일까지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도(직할시), 시(구역), 군 선거위원회들이 조직돼 사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함.
- 북한, 김정일 당사업 시작 중앙보고회...“김정은 결사옹위”(6/18,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가 방영한 18일 평양체육관의 중앙보고대회에서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보고자로 나서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유훈 통치'를 철저히 옹위하자고 피력하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강조하는 미래과학자 거리와 백두산 선군청년발전소 건설 등 '강성국가 건설'에서 성과를 내자고

요구함.

- 18일 보고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박봉주 내각총리, 강석주 당비서, 박영식, 리영길 총참모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당·정·군의 책임간부들이 대거 참석함.

■ 북한, 지방의회 대의원선거 선거구 구성(6/20,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19일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 및 분구가 조직됐다”고 보도함.
- 연합뉴스는 북한이 지난 14일 중앙선거지도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부위원장에 김평해 노동당 비서, 서기장에 홍선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을 각각 임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 박봉주(내각 총리), 봉화화학공장 현지 요해 및 “에너지절약형 생산공정 확립의 중요성” 등 강조(6.15, 중앙통신·중앙방송)
-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6월 15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6.15,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영남, 6월 16일 국제태권도대표단(단장: 룡와이맹 국제태권도연맹 부총재)과 담화(6.16,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당 사업 개시일’ 관련 ‘당을 영도의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한 전도양양한 당으로 강화 발전시킨 것은 업적중의 업적’이라고 칭송하며 ‘김정은 영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참된 혁명전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6.19,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6월 20일 故 김룡린(김일성상계관인이며 인민배우인 前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배우단 배우) 빈소에 화환 전달(6.21, 중앙방송)
- 박봉주(내각총리),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장과 중앙동물원 개건보수 공사장 현지요해(6.20, 중앙방송)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다. 경제 상황

- 북한 “100년만의 가뭄으로 피해 극심…전국 30% 피해”(6/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현재 전국적으로 44만1천560정보의 모내기한 논에서 13만6천200 정보의 벼모들이 말라가고 있다”고 16일 보도함.
  - 통신은 특히 황해남도에서 모내기한 논 면적의 80%, 황해북도에서는 논의 58%가 마른 상태에 놓였다고 설명함.
  - 북한은 “왕가물(왕가뭄)로 피해 면적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벼모 대신 다른 작물들을 심는 등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설명함.
- 유엔 “북한, 가뭄으로 올해 쌀 수확량 12% 감소”(6/20, 연합뉴스)
  - 20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세계정보·조기정보 국가보고서’는 북한의 올해 쌀 수확 추정치를 지난해(260만t)보다 12% 감소한

230만으로 추정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전함.

- 보고서는 “북한의 전체 논 면적 54만 4천 헥타르(ha)의 4분의 1 수준인 13만 6천 헥타르가 가뭄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며 “올해 생산량이 최근 5년간 평균치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함.
- 보고서는 “북한 식량 생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황해도 지역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올해 식량 생산의 현저한 감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주일 내로 더 많은 비가 내려야 하다”고 지적함.

## 라. 대외 경제 관계

- 북한관광 전문 미국 여행사 대표에 北 ‘입국금지’ 조치(6/18, 연합뉴스)
  - 미국에서 북한 관광을 전문적으로 주선했던 ‘아시아퍼시픽여행사’(APTL) 여행사 대표 월터 키츠씨는 최근 연합뉴스에 “우리 여행사를 통해 2007년 북한에 다녀온 애덤 존슨 스탠퍼드대학 교수가 2012년 1월, 북한을 배경으로 한 소설 ‘고아원 원장의 아들’(The Orphan Master's Son)을 출간한 후 북한으로부터 돌연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결국 관련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러시아 올해 1분기 수출입 규모 급감(6/19, 연합뉴스)
  - 19일 코트라가 러시아 관세청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한 ‘2015년 1분기 러시아-북한 교역 동향’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1~3월 대러 수입은 1천700만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30% 감소했고 수출도 57만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보다 44%가 줄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수입에서는 ‘제분’과 ‘조제식료품’이 각각 93%, 73% 감소해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수출은 상위 10개 품목 가운데 ‘플라스틱’과 ‘고무’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뉴스는 전함.
- 100년만의 최악 北가뭄에 中대사 농장찾아 모내기 지원(6/19, 북경청년보)
  - 북경청년보(北京青年報)는 19일 100년만의 가뭄을 겪는 북한에서 전국적으로 농촌 지원활동이 펼쳐지는 가운데 전통에 따라 리진권(李進軍) 주북 중국대사가

직접 대사관 외교관들을 인솔해 평양시의 북중(조중) 친선 택암 협동농장에서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전함.

- 몽골, 나진항 통해 한국에 석탄 수출(6/20, 미국의소리)
  - 몽골의 석탄채굴회사가 북한 나진항을 통해 한국에 석탄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로이터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몽골 석탄채굴회사 샤린 골(Sharyn Gol JSC)은 지난 19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삼목물류와 석탄 수송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에 따라 석탄은 몽골에서 4천km 떨어진 북한 나진항까지 열차로 운송된 후 한국으로 배로 옮겨짐.
  - 샤린 골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한 해 30만t의 석탄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출 가격 아직 협상 중”이라고 밝힘.

- 駐北 인도네시아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6월 16일 강서구역 北-인도네시아 친선 약속협동농장에서 친선노동 및 지원물자 전달(6.16, 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0호(6.11, 발표), 33개 단위(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등)에 「모범준법단위 칭호(혁명적 준법기풍 확립과 사회제도 공고발전 모범)」 수여(6.18, 중앙방송)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北 10대 병사 비무장지대 GP로 귀순…“상습구타에 불만”(6/15, 연합뉴스)
  - 북한군 병사(하전사) 1명이 15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비무장지대(DMZ)내 소초(GP)를 통해 우리 군에 귀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군 관계자는 15일 “오늘 오전 8시께 중동부 전선에서 북한군 하전사(병사) 1명이 우리 GP로 귀순했다”며 “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 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히고, “조사 결과 이 병사는 군에서 상습 구타를 당해 북한 현실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귀순을 결심했다고 한다”고 설명한 내용을 뉴스는 보도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 마. 사회 동향

- 북한, 6·15 공동선언 15주년 맞아 김정은 찬양(6/15,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15일 3면 사설에서 “지금 온 겨레는 북남공동의 자주통일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정일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다”고 치켜세우고,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15년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조국통일사상과 노선, 영도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준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역사”라고 우상화함.
  - 조선중앙통신도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6·15통일시대를 안아오신 절세의 애국자이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한 희세의 성군영장’으로 치켜세우며 6·15 공동선언을 ‘빛나는 결실’, ‘일대 사변’으로 규정함.
  - 조선중앙방송은 15일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들과 인터뷰를 소개함.
  - 위원들은 인터뷰에서 6·15 공동선언은 ‘통일지향선언’, ‘동포애의 선언’, ‘민족

협력선언'이라며 “어떤 침략과 반역의 광풍도 민족의 드높은 통일열망과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주장함.

- “북한서 푸른하늘전자가 만든 국산 컴퓨터 인기”(6/1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6일 “푸른하늘전자가 제품의 개발과 생산, 판매의 일체화로 국산 컴퓨터들을 내놓고 있다”며 푸른하늘전자가 만드는 국산컴퓨터 등 전자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함.
  - 컴퓨터 상표 이름은 ‘푸늘하늘’이며 생산 공장은 평양 통일거리에 있으며 공장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등을 졸업한 20대의 연구사들이 일체식, 휴대형, 탁상형 컴퓨터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함.
- 첩보요원 활약상 다룬 북한 인기 연속극 ‘방탄벽’ 종영(6/16, 조선신보)
  - 16일 조선신보는 북한 텔레비존극창작사에서 만든 조선중앙TV가 지난 5월부터 방영한 7부작 연속극(드라마) ‘방탄벽’이라는 연속극이 시청자들에게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종영 후에는 DVD로 제작돼 보급 중이라고 전함.
  - 신보는 연속극 감독을 맡은 엄창걸 연출가의 말을 인용해 “항일혁명투쟁시기 온넛과 온몸이 그대로 성벽을 이뤄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한 선열들의 불굴의 모습을 작품에 담고 있다”고 설명함.
- 북한 “최근 세쌍둥이 잇따라 출산…전례 없는 일”(6/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북한 양강도에 사는 조금일이 지난달 5일 평양산원에서 딸 세쌍둥이를 낳아 453번째 세쌍둥이가 탄생했다고 보도함.
- 북한, 고려호텔 화재 후 중단한 외국인 인터넷 서비스 재개(6/18, 노스코리아테크)
  - 노스코리아테크는 18일 평양 고려호텔 화재 직후 중단됐던 북한의 외국인 대상 3세대(3G)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가 재개 됐다고 보도함.
- 북한 “메르스·사스·에이즈 만병통치약 개발” 선전(6/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자체적으로 개발한 면역부활제인 ‘금당-2 주사약’을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조류독감뿐 아니라 에이즈까지 예방·치료할 수 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금당-2 주사약'이 희토류가 포함된 비료를 뿌려 키운 개성인삼의 성분을 추출해 만들었다고 설명함.
- 더욱이 이 주사약을 맞은 사람 중에는 전염병 감염 지역에 다녀왔더라도 질병에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고, 미국에 악성독감이 퍼졌을 때도 이 약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주장하기도 함.

■ 북한, 메르스 유입 우려 중동 주재원 귀국자제 방침(6/20, 미국의소리)

- 북한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차단을 위해 중동 지역에 근무하는 공관 근무자와 파견 근로자에게 귀국을 자제라하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함.
- 방송은 정부 관계자가 "보건의료 분야가 열악한 북한은 전염병이 북한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에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함.

■ 북한, 월드컵에 대량 기업광고...“전례 없던 일”(6/21, 연합뉴스; 6/16, 조선중앙TV)

- 북한이 최근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예선전에 자국 기업 광고판을 대거 내걸어 이목을 끌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함.
- 조선중앙TV는 지난 16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북한과 우즈베키스탄의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경기를 방송했는데 경기장에는 개성 고려인삼, 평양 건재공장 등 북한 기업 광고판들이 대거 등장했으며 특히 개성 고려인삼과 조선금강그룹은 후원 자금을 많이 낸 듯 1~2개 건너 하나씩 광고판을 내걸었음.
- 이처럼 북한이 국제 스포츠대회장에 자국 기업 홍보판들을 한꺼번에 많이 내걸어 TV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되도록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각급 병원들과 치료예방기관들, 농촌들에서 현장치료대활동 전개(6.16, 중앙통신)
- 자강도 여러 단위(자성임산사업소 건설직장 등)에 ‘김일성·김정일 형상’ 모자이크벽화(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어 모시리!) 건설, 해당단위들에서 준공식 진행(6.18, 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543호(6.16), 모범적인 단위들에 3중3대혁명붉은기(평양면옥)·2중3대혁명붉은기(13개 단위)·3대혁명붉은기(22개 단위)를 수여(6.19, 중앙방송)
- 「국제요가의 날」설명회, 6월 21일 김형훈(보건성 부상) 및 주북 인도 대사(아제이 쿠마르 샤르마) 등 참석한 가운데 진행(6.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올해 ‘평양 중심거리와 공원 등에 50여만 그루 식수 및 21만 3,000㎡의 새 품종 잔디 단장 등 “평양이 녹음속의 도시로 그 면모를 나날이 일신하고 있다”고 선전(6.21, 중앙통신)

© 북한연구실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세계 핵무기 수는 감축…성능은 개량…北 6~8개 추정(6/15, 연합뉴스)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연례군축보고서에서 핵보유 국가들이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지만 무기 성능은 강화하고 있다고 밝힘.
  - 전체 핵무기의 90%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1단계 전략무기감축 협정의 후속 협정인 ‘New START’ 협정에 합의했지만, 어느 쪽도 실질적으로 축소하지 않았고, 감축 속도도 10년 전보다 느려졌다고 보고서는 밝혔음.
  - 특히 이 두 나라는 생산시설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교체하는 등 ‘광범위하고 고비용의 장기 현대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음.
  - 보고서는 또한 9번째 국가인 북한이 6~8개의 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북한이 군사적 핵 능력을 개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탄도 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를 개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음.
  
- 미 상원, ‘북한 핵무장국’ 표현 담긴 국방수권법안 통과(6/19, 연합뉴스)
  - ‘북한은 핵무장국(a nuclear-armed country)’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미국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이 이날 표결을 거쳐 통과했으며, 이 법안은 지난달 15일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과는 별개라서 앞으로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함.
  - 상원 국방수권법안에는 정부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비 상작전 예산을 380억 달러(약 42조 원) 더 늘리는 내용이 담겼고,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 국방비만을 편중되게 늘리기 위한 시도라며 반대해 왔음.
  -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2일 보고서에서 이 법안이 백악관으로 송부되면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나. 미·북 관계

- 미국 대선주자 힐러리의 대북관...“북한은 전통적 위협”(6/15, 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가진 대중연설에서 북한을 러시아, 이란과 함께 전통적 위협으로 지칭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음.
  - 클린턴 전 장관은 회고록이나 과거 발언 등에서도 “많은 주민이 비참한 가난 속에 사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전체주의 국가”, 또는 “기아에 허덕이면서도 빈약한 자원을 핵무기 개발과 이웃과의 대적에 소진하는 정권”이라며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바 있음.
  -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화 용의를 천명한 취임 첫해인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미국이 악수를 청한 데 대해 북한이 주먹으로 응수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음.
  
-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북한인권회의 참석차 브뤼셀 방문(6/16,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5~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음.
  - 킹 특사는 15일 제네바를 방문한 뒤 16일 브뤼셀로 건너가 북한인권조정회의에 참석하며, 회의에서 유엔 및 유럽연합(EU) 관계자들과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및 향후 대응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이번 회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최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 간부들을 숙청하는 등 ‘공포정치’를 자행하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러셀 미 차관보, “북한, 핵-경제 병진정책 기능 환상...절대 불가”(6/19, 연합뉴스)
  - 러셀 차관보는 이날 언론 간담회에서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통해 직접적이고 분명한 비핵화를 약속했는데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경제 병진정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러셀 차관보는 특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동시에 외부의 원조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실패한 경제도 구제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하고 있다”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했음.

- 그는 또 “북한은 이전의 비핵화 약속을 존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신뢰할 만하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협상을 재개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합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며 비핵화 6자회담의 복귀를 거듭 압박했음.
  - 그는 이어 내주로 예정된 제7차 미·중 전략경제대화(S&ED)에서도 북핵 문제를 진단하는 동시 ‘비핵화 협상만이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북한 정권에 깨닫게 하기 위해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 국무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안해...7년째 제외(6/20,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말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라는 미 의회 일각의 압박에도 1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4년 테러보고서’에서 쿠바·이란·시리아·수단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음.
    - 국무부 보고서 기준으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2008년 10월 북·미 간 핵 프로그램 검증 합의 직후 명단에서 빠진 이래 7년째임.
    - 국무부가 소니 해킹 사건 이후 의회 일각에서 재지정을 요구했으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은 것은 아직 해킹사건 자체를 테러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현재 미 국무부가 규정하는 테러행위의 핵심요건은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고 ‘인명에 대한 위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소니 해킹사건의 경우 이를 전통적 개념의 테러행위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다. 중·북 관계

- 북한, 중국대사 소식 누락...북·중관계 ‘냉랭’ 반영(6/19, 연합뉴스)
  - 지난해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되다시피 한 북한이 공식매체에서 중국 대사 관련 소식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음.
  - 리진권 주북 중국대사는 이미 지난 5일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북한을 돕기 위해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평양시의 북중(조중) 친선 택양협동농장에서 모내기 지원활동을 했지만,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포함한 모든 북한의 공식

- 매체는 이날까지 14일째 리 대사의 이런 소식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음.
- 반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이 고창남새(채소)전문협동농장에서 발매기 친선노동을 하고 물자를 지원한 사실을 당일에 바로 보도해 최근 부쩍 가까워진 북·러 협력관계를 반영했음.
  - 북한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류홍차이 당시 중국 대사와 직원들이 5월에 택암 협동농장에서 친선노동을 하고 지원물자를 전달한 소식을 즉각 보도했지만, 지난해 7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의 집권 후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해 북·중관계가 급랭하자 의도적으로 중국 측에 ‘접접함’을 전달한 것으로 보임.

## 라. 일·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마. 러·북 관계

- 북한-러시아 올해 1분기 수출입 규모 급감(6/19, 연합뉴스)
  - 코트라가 러시아 관세청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한 ‘2015년 1분기 러시아·북한 교역 동향’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1~3월 대러 수입은 1천700만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30% 감소했으며, 수출도 57만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보다 44%가 줄었다고 밝힘.
  - 수입에서는 ‘제분’과 ‘조제식료품’이 각각 93%, 73% 감소해 가장 큰 낙폭을 보였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오일 및 가스’는 112%가 늘었으며, 이 품목은 유연탄이 대부분으로 수입액은 1천400만 달러였음.
  - 수출은 상위 10개 품목 가운데 ‘플라스틱’과 ‘고무’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특히 ‘기계류’, ‘전기기기’, ‘철강제품’ 모두 50~70%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음.
  - 코트라는 “북러 교역량 감소는 러시아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 요인이 크다”라고 분석했음.

- 북한, 러시아 파르티잔스크시에 책 기증…‘친밀함’ 과시(6/19, 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11일 러시아 연해주 동부 파르티잔스크 시에 도서를 기증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했음.
  - 기증된 도서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노작과 북한의 역사·문화 관련 서적들이며, 지금 북한의 모습을 담은 화첩도 포함됐음.
  - 크멜로브 시 의회 의장은 “북러 친선의 해에 북한 도서들을 기증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친선관계가 적극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음.
  - 한편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5월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불참했지만, 이달 12일 러시아 국경절인 독립기념일 축전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내고 하바롭스크시와 극동 국립인문종합대학에 도서를 기증하는 등 ‘친밀함’을 과시하고 있음.

## 바. 기타

- 특이사항 없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한미 원자력협정 정식 서명…내년초 발효 전망(6/16,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에너지부에서 원자력협정 서명식을 가졌으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 새 협정안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의 관련 조항들을 전면 개정했으며, 특히 핵연료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았음.

- 이에 그동안 미국의 사전 동의 규정 등에 따라 완전히 묶여 있던 우리나라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 가능성의 문이 열렸으며, 기존 41년이었던 협정의 유효기간은 20년으로 대폭 단축했음.
- 다만 협정 만료 2년 전에 어느 한 쪽이 연장 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음.

■ 윤병세 외교부장관, “한미 정상회담 최대 의제는 북한과 북핵문제”(6/16, 연합뉴스)

- 방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한과 북핵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윤 장관은 이날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북한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핵문제에 대해 한·미·일·중·러 5자간 공조를 유지하는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윤 장관은 특히 “북한이 최근 여러가지 특이한 행동들을 취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고 이 같은 행동들이 앞으로 수개월간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미칠 영향과 함의를 논의했다”며 압박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입장 소개했음.
- 윤 장관은 한·일간의 최대 이슈인 과거사 문제의 경우 “미국도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있고 우리도 나름의 입장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방미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 노력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했음.

■ 한·미, “보다 강력한 대북 압박·5자공조 강화”(6/17, 연합뉴스)

- 방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날 토니 블링큰 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꾀하기 위해 한·미·일·중·러 5자 간 공조를 강화하고 보다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서기로 했으며,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하기로 했음.
- 양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시기와 관련,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재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음.
- 블링큰 부장관은 “박 대통령의 방미는 강력하고 독보적인 한·미 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고 북한·북핵 문제 공조 강화와 글로벌 협력 진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윤 장관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에 블링큰 부장관은 역내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 나. 한·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다. 한·일 관계

- 아베 총리, “전후 70주년 담화에 반성 포함”…‘사죄’는 언급없어(6/15,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홍콩 봉황위성TV와 인터뷰를 갖고 올해 종전 70주년을 계기로 8월에 발표할 담화(아베 담화)에는 반성을 비롯해 전후 일본이 걸어온 평화의 길과 앞으로 일본이 걸어갈 국가 청사진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일본은 일찍이 아시아인민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심각한 반성에 기초해 세계의 평화발전,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을 위해 진력했다”며 향후 국제협조주의와 평화주의 기초 아래 지역과 세계평화에 공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아베 담화에 ‘반성’을 포함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는 주목되지만, 인터뷰 내용에는 ‘식민지배’, ‘침략’ 등을 언급하겠다는 내용은 빠져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 ‘반성’이 담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 日 관방장관, ‘위안부협상 최종단계’ 朴대통령 발언 언급회피(6/15,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음.

- 그러면서 그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한일간에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현안이 있다고 덧붙였음.
-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간 위안부 문제 협의와 관련, 지난 12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considerable progress)이 있었으며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final stage)에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국방부, “한일 국방정보본부장 교류 연기”(6/15, 연합뉴스)

- 미야가와 타다시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장은 당초 이달 15~17일 한국을 방문해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과 회담할 계획이었지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금 일정을 다시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일 양측 간) 서로 입장이 좀 맞지 않아서 연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그는 이번 회담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선을 긋고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 회담 연기와 관련해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회담은 오는 8월 이후는 돼야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日 야치 국가안전보장국장 방한 검토…이병기 靑비서실장 면담 조율(6/17,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다음 주 한국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닷케이 신문이 보도했음.
- 닷케이는 또한 야치 국장이 22일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에 참석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보도 내용대로라면 야치 국장의 방한 추진은 박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considerable progress)이 있었으며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final stage)에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 고위층의 의사를 확인하는 차원일 가능성도 있어 보임.
- 이 실장은 아베 총리의 외교 책사로 평가받는 야치 국장과 전부터 친분을 쌓아 왔으며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10월 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따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 **日관방장관, “군위안부 기본 생각 한국에 이해 구할 것”(6/18, 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군위안부 문제에서 큰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을 질문받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생각은 오늘까지 말해온 대로”라며 “우리나라의 기본 생각을 끈질기게 한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는 결국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군위안부와 관련한 법적 문제는 종결된 만큼 법적 책임 인정과 그것을 전제로 하는 배상 등은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됨.
  - 스가 장관은 또 한일 정상이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에 대해 “그런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다면 ‘그렇구나’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윤병세 장관이 방일 기간 아베 신조 총리를 예방할지에 대해 “일정 관계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도 서울에서 열리는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할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의 박 대통령 예방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아베 총리, “과거의 헌법해석 고집은 정치가로서 책임 방기”(6/18,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작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한데 대해 “국제 정세에 눈 감고 과거 해석을 고집하는 것은 정치가로서의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 아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키로 한 지난해 7월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 아베 총리는 “그때그때의 내각이 ‘필요한 자위 조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안보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헌법 해석을 변경한 것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 **軍위안부협상서 日 재정지원·사죄, 韓 최종해결 보증 논의(6/18,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재정 지원하고 사죄의 성명을 발표하는 대신 한국 정부가 문제의 최종 해결을 보증하는 구상이 양국 정부 간에 논의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 신문은 한국 측은 일본이 정부 예산을 사용해야 ‘일본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사실상 인정해 돈을 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발표하고 주한 일본대사가 피해자를 만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음.
  - 대신 한국 정부가 박근혜 정권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보증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미국에서 열리는 ‘반일(反日) 캠페인’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일본 측 요구 사항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닷케이 보도에 대한 질문에 “해당 기사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음.
- **한일, ‘세계유산등재에 강제징용 반영’ 사실상 합의(6/21, 연합뉴스)**
- 양국은 21일 도쿄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세계유산 등재 신청건과 관련, “세계유산위원회의 책임 있는 위원국으로서 신청된 안건이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등재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음.
  - 다만 두 장관은 최대 쟁점 현안인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돌파구를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군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만 밝혔음.
  - 외교부는 회담에서 윤 장관은 전후 70주년 일본 총리 담화에 “역대 내각 담화의 역사인식이 분명히 표명되기를 기대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메르스 사태와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해 양측은 ‘심각한 우려’를 같이하면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함.
  - 일본의 집단 자위권 법제화에 대해 윤 장관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는 가운데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한국 및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음.
  - 윤 장관은 기시다 외무상에게 금년 말 이전 방한할 것을 초청했고 기시다 외무상은 이를 수락했다고 전했으며, 다만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두 장관은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쳤고,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은 ‘연내 가장 빠른 편리한 시기’에 열리도록 노력한다는데 뜻을

같이했음.

- 박근혜 대통령·아베 총리 교차참석…정상회담 수순 밟나(6/21, 연합뉴스)
  - 박 대통령은 서울에서 주한 일본대사관이 개최하는 리셉션에, 아베 총리는 도쿄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이 개최하는 리셉션에 각각 참석해 국교정상화 50주년 축하를 하기로 했음.
  - 다자회의를 제외하고 정상회담을 하지 못한 두 정상은 상대 측 행사에 참석해 축하를 하기로 한 것 자체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관계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풀이되며,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에까지 이르는 관계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됨.
  - 그러나 정상회담과 관계정상화까지는 최대 ‘난제 중의 난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고, 이 문제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앞으로 한일관계를 가늠하는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또 아베 총리가 8월 담화에서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분명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할지도 관계정상화로 가는 길목에서 중대 고비임.

##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마. 미·중 관계

- 前 美 재무장관, “개혁 미진, 中 경제에 실질 위험”(6/15 연합뉴스)
  - 중국 지도부의 개혁 의지에도 실행이 계속 더딘 것이, 중국 경제에 “실질적 충격”을 가할 것이라고 행크 폴슨 전 미 재무장관이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회견에서 경고했음.
  - 폴슨은 “국유기업 개혁이 너무 더디다”며, “국유기업 경쟁력이 회복되지 못하면 경제의 핵심 분야가 시장 논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 뿐만 아니라 폴슨은 국무원이 채무가 22조 위안(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지방 정부를 구제하기 위해 최근 처음으로 직접 차입을 허용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아직은 통제가 될지 모르지만, 문제 해결을 늦출수록 전이 충격이 확산하면서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음.
  - 그는 이와 더불어 미국 기업도 미중 경협강화를 무조건 지지하지 않고 경계의 시각이 있다고 소개했음.
- **미·중 23일부터 전략경제대화··북한문제 거론 가능성(6/16,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오는 2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워싱턴D.C.에서 7번째 전략경제대화(S&ED)를 개최하며, 미국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그리고 중국에서는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왕양 부총리가 각각 대표로 이번 대화에 참석할 예정임.
    -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두 나라가 양자간 현안과 지역, 국제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됐으며, 올해 들어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이나 사이버안보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해 왔던 만큼,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 치열한 기 싸움을 할 전망이다.
    - 미 국무부는 중국과의 전략경제대화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 지 않았지만, 외교 소식통들은 북한이 올해에도 무력 도발을 이어간 만큼 북한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예상했음.
- **중·미·일, 남중국해 인공섬 일부완성 놓고 공방(6/17, 연합뉴스)**
    - 중국이 16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에 건설 중인 인공섬이 일부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히자 미국과 일본은 나란히 우려를 표시하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중국 역시 비난의 수위를 높이며 물러서지 않고 있음.
    -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성명에서 난사군도 일부 주둔 도서(암초·산호초) 지역에 대한 매립 작업이 “조만간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인공섬 건설은 중국의 주권 범위 안의 일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으며 중국의 필요한 군사적 방어 수요를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음.
    - 반면 미 국무부는 “중국의 계획은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중국의 해상영유권 주장만

강화할 뿐이라고 비판했으며, 일본 역시 중국에 일방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

-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역외국가들은 지역의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긴장을 과장하고 조장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으며, 스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특별히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음.

## 바. 미·일 관계

- 일본에 美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 한시 배치…작년 2배(6/17, 연합뉴스)
  - 미군의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가 다음 달부터 일본 도호쿠 지방 북단에 있는 아오모리현 미사와 비행장에 일시적으로 배치될 예정임.
  - 이번에 배치되는 글로벌호크는 원래 괌에 있는 미군 앤더슨 기지를 근거지로 운용되던 장비이며 이 가운데 2대는 11월, 나머지 2대는 12월까지 미사와 비행장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짐.
  - 도호쿠방위국은 여름철에 태풍 등 악천후의 제약을 피해 글로벌 호크를 운용하기 위해 근거지를 일시적으로 옮기는 것이며 시설·설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사와 기지가 거점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도호쿠방위국은 글로벌호크를 작년의 2배로 늘려 배치하는 것에 관해서는 날씨의 영향을 피해 최대한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정보수집, 경계·감시·정찰활동을 더욱 실효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 미·일, 필리핀과 내주 잇단 해상훈련…중국 견제(6/18,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이 다음 주 남중국해 분쟁해역 인근에서 필리핀과 각각 합동 해상 훈련을 하며 훈련은 중국 견제 성격이 짙은 훈련으로 해석됨.
  - 먼저 미국과 필리핀 해군의 연례 합동훈련(CARAT)이 오는 22일 남중국해 분쟁해역 인근에 있는 필리핀 팔라완섬 해상에서 실시되며, P3 오리온 정찰기와 헬리콥터, 군함 등을 동원해 수색·구조 훈련을 하며 군사 공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임.
  - 이와 별개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필리핀 해군은 남중국해 주변 해역에서 수색·구조 훈련을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훈련 계획과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2~26일 일본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가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미·러 관계

- 러 국방부, “미국 동유럽에 중화기 배치 땀 대응 조치”(6/15, 연합뉴스)
  -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 조정관인 유리 야쿠보프 상급대장은 미국이 발트3국과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등에 탱크, 대포, 장갑차 등의 중화기를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논평했음.
  - 그는 “중화기들이 실제로 동유럽 국가와 발트국가들에 배치되면 냉전 이후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가장 공격적인 행보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도 (유럽으로 향한) 서부 전략 지대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러시아가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에서 완전히 탈퇴했기 때문에 국경 지역에 탱크, 전투기, 대포 등을 배치하는 데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러시아와 ‘신냉전’ 상태 미국, 유튜브 통해 선전전(6/17, 연합뉴스)
  -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계기로 서방과 러시아 간 ‘신냉전’ 상태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호적 국제여론 조성을 위해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는 방식으로 대(對)러시아 선전전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음.
  - 이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근 북해에서 미 해군 구축함 로스 호와 러시아 전투기와의 조우 영상이며, 마치 냉전 당시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상케 하는 장면으로 구성됐음.
  - 미 국방부는 당시 미 해군이 국제적으로 용인된 해상충돌 예방법규를 준수했고 항행 자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음.
  -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관영 러시아 TV(RT)를 통해 “로스 호 승무원들의 적대행동은 감시소 요원들과 흑해함대 소속 함정들의 우려를 더했다”면서

“Su-24기 승무원은 러시아 영해 침입에 강력히 대응하고 러시아의 국익을 방어하겠다는 뜻을 미 해군 함정 승무원들에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 꼬이는 미래 관계…러시아 “미국 달착륙 진위 조사하자”(6/19, 연합뉴스)
  -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수사위원회의 블라디미르 마르킨 대변인은 일간 이즈베스티야에 기고한 글에서 조사를 통해 미국의 역사적 달 착륙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마르킨은 기고문에서 1969년에 있었던 인류 최초의 달 착륙 장면을 담은 비디오 원본의 실종과 지구로 가져온 달 표면의 암석 행방에 관한 조사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우리는 그들(미국)이 우주인을 달에 보내지 않고 (허위) 동영상 만들었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다”면서 “달 착륙 비디오나 달 암석(월석)은 인류 유산의 일부이며 이것이 사라진 것은 우리 모두의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 아. 중·일 관계

- 中, “日양심, 평화헌법 수호 희망”…안보법 수정 비판(6/15, 연합뉴스)
  -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안보 관련 법안 제·개정에 반대 하는 시위에 대한 평가에 “오늘날 광대한 일본 인민과 양심 있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평화헌법을 수호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루 대변인은 그런 일본인들은 정부가 군사안보영역에 대해 취하는 일련의 정책에 대해서도 고도의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가운데 도쿄에서는 안보 관련 법안 제·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등이 일본 국회를 둘러싸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음.
- “전쟁 전철 밟지 않을 것” 아베 총리 발언에 中, “실제행동 보여라”(6/16,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홍콩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시는 과거 전쟁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 지도자가 최근 밝힌 것들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실제행동’을 보이라고 요구했음.

- 루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금년도와 같은 민감한 해에 일본이 성실한 행동으로 역사 문제에 대해 정확한 태도를 취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이웃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또 “올해는 중국인민의 항일전쟁과 세계인민의 반파시즘 전쟁(2차 대전) 승리 70주년이 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역사적 원인을 볼 때, 중국과 일본 주변의 일부 아시아 이웃 국가들이 일본의 군사안보와 관련된 일련의 동향을 고도로 경계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음.

■ 일본, AIIB 운영개시 후에 참여 여부 판단(6/19, 연합뉴스)

-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AIIB의 실제 운영 상황을 보고 참여할지 판단하기를 원하며 올해 중 예정된 운영 개시 전에는 이를 결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임.
- 특히 집권 자민당 등에서는 ‘일본이 참여하는 경우 거액의 출자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므로 재정 부담에 걸맞은 대가를 얻을 수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그간 AIIB의 지배구조나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며 우려를 제기했음.
- 독일이나 영국 등 주요 7개국(G7) 구성 국가 일부가 AIIB 설립에 가담하면서 투명성 문제가 상당히 해소됐다는 평가도 있으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음.

## 자. 중·러 관계

■ 러, “Su-35 첨단 전투기 중국 수출 계약 연말까지 체결”(6/16, 연합뉴스)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르 부르제 에어쇼에 참가한 러시아 ‘통합항공사’ 유리 슬류사리 사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에 Su-35 24대를 수출하는 계약이 연말까지 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음.
- 러시아와 중국은 벌써 몇 년 동안 Su-35 전투기 공급과 관련한 협상을 벌여오고 있으며 이미 의향서도 체결했으나 계약의 세부 내용을 두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 측은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는 Su-35가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로 꼽히는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22 랩터보다 엔진이나 레이더 성능에서 더욱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한편, 중국은 우선 Su-35를 대량 구매해 자체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쟈-20이 실전 배치되기 전까지의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임.

■ 푸틴 대통령, 9월 중국 ‘항일 전승기념 열병식’ 참석 확인(6/19,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SPI EF)에 참석한 장가오리 중국 부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오는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 푸틴은 다음 달 8~10일 러시아 중부 도시 우파에서 열리는 브릭스(BRICS) 정상회 의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시 주석은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열린 2차대전 종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했으며, 푸틴 대통령의 방중은 ‘답례’ 성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차. 일·러 관계

■ 푸틴 대통령, “日과 영토문제도 해결 가능…정상회담 필요”(6/21, 연합뉴스)

- 푸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각국 통신사와 진행한 회견에서 쿠릴 4개섬 문제에 대해 “모든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도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 푸틴 대통령은 또 일본을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하고, 일본 기업이 참가하는 사할린 연해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을 확대할 방침을 표명하는 등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한 양국간 경협에 의욕을 보였음.
- 아베 총리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적절한 시기’에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실현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으며, 푸틴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적극 호응함에 따라 푸틴의 일본 방문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 Ⅲ. 북한 인권 동향

####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군대, 구타와 남한 영상물 시청 등 기강 해이”(6/16, 미국의소리)
  - 한국 군 관계자는 15일 한국에 망명한 북한 군 병사가 19세 하전사로 상습 구타 등 군대 현실에 불만을 품고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 북한 군인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에 망명한 것은 2000년 이후 8번째임.
  - 지난 2002년에는 병사 1명이 소총을 들고 도라산역 인근을 통해 망명했고, 2008년에는 군관(장교) 1명이 판문점 인근, 부사관 1명이 철원 인근을 통해 각각 군사분계선을 넘었음.
  - 또 2010년에는 하전사 1명이 강원도 동부전선, 2012년에도 하전사 1명이 서부전선, 같은 해 10월 2일에는 중급병사가 동부전선을 통해, 6일에는 중급병사 1명이 상관 2명을 사살한 뒤 경의선 남북관리구역을 통해 한국에 망명했음.
  - 전문가들은 이번 경우처럼 상습 구타를 이유로 북한 병사가 한국에 망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함.
  - 군대 안에 정치조직이 있어 구타가 발생하면 바로 보고 돼 처벌을 받기 때문에 위계질서가 있었다는 것임.
  - 전문가들은 북한 군인들의 기강과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며 몇 가지 핵심 요인들을 지적함.
  - 한국 동아대학교의 강동완 교수는 이번 망명이 정부가 아닌 장마당에 의존해 성장한 이른바 장마당 세대의 특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음.
  -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 대표는 북한 중상위층 가정에 한 자녀를 가진 가정이 크게 늘어난 것도 결속력이 약화된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음.
  - 이런 배경 때문에 탈영을 통해 상부에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가 늘고, 북-중국경지역에서는 식량 문제로 탈영병이 중국으로 건너가 강도 행각을 벌이거나 현지 주민을 살해하는 사례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 군대의 충성심과 결속력 약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외부 정보의 유입을 들었음.
  - 2012년 이후 하달된 북한 군대 관련 내부 문건 6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급에 관계없이 남한 드라마 등 외부 매체를 접해 적발된 사례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임.

- 한국의 한 매체(TV조선)는 최근 입수한 북한 군 교육자료를 인용해 2013년 한 해 동안 한류문화를 접하다 적발된 건수가 1만 6천 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대대적인 단속에도 외부 매체 시청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북한체제의 뼈대인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인민군대의 충성도가 그만큼 낮아진 것으로 풀이하고 있음.
- 양강도, 강냉이 값 급등에 엇갈린 민심(6/18, 자유아시아방송)
- 위연-못가 구간 철도건설을 위해 청년동맹 산하 ‘백두산군청년돌격대’ 수만 명의 인원이 몰려온 탓에 양강도에서 가난한 서민들의 주식인 강냉이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다.
  - 15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백두산관광철도 철길공사를 위해 돌격대원들이 들어 온지 20일 정도가 됐다”며 “그 사이 강냉이 값이 1kg 당 우리(북한)돈 1천7백 원에서 2천2백 원으로 급격히 올랐다”고 이야기했음.
  - 강냉이 가격이 상승했으나 주민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라고 그는 덧붙였는데, 강냉이 가격이 오른 대신 장마당에서 밀가루 가격이 크게 내려 하층 서민들도 밀가루를 사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 돌격대가 들어오기 전까지 양강도 해산장마당에서 kg당 북한 돈 2천7백 원이었던 러시아산 통밀은 15일 현재 북한 돈 1천7백 원까지 값이 내렸다고 그는 언급했음.
  - 가난한 주민들의 밥상에서 찾아보기 어렵던 밀가루 빵이나 떡국(수제비) 등 밀가루 음식이 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 장마당에서 밀가루 빵의 가격이 내려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 하지만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17일 “강냉이 가격이 올랐는데 좋을 게 뭐가 있겠냐”며 “밀가루 값이 녹어졌다고 해도 먹고 사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음.
  - 강냉이 가격이 오른 것은 돌격대원들에게 술을 만들어 팔기 위해 주민들이 강냉이를 마구 사들인 결과라고 그는 언급했음.
  - 돌격대원들의 식량으로 지급된 밀과 밀가루를 돌격대 고위 지휘관들이 많이 내다 팔면서 밀가루 값이 내렸다고 그는 설명했다.

## 2. 북한 인권

- 남북한, 유엔 인권이사회서 북한인권사무소 놓고 공방(6/16, 연합뉴스)
  - 남한과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달 중 서울에 설치되는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고 보도했음.
  - 남한은 15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본부에서 시작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29차 정기이사회 첫날 회의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밝힌 반면 북한은 사무소 설치를 강력 반발했음.
  - 최석영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연설에서 “한국은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의 현장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에 설치될 북한 인권사무소가 맡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음.
  - 카지 마사코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도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환영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히고 “북한에서 계속 중대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러나 김영호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진정한 인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인권의 정치화일 뿐이며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거칠게 비난했음.
  
-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북한인권회의 참석차 브뤼셀 방문(6/16,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5~19일 스위스 제네바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음.
  - 킹 특사는 15일 제네바를 방문한 뒤 16일 브뤼셀로 건너가 북한인권조정회의에 참석함.
  - 킹 특사는 회의에서 유엔 및 유럽연합(EU) 관계자들과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및 향후 대응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이번 회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최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 간부들을 숙청 하는 등 ‘공포정치’를 자행하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인권단체들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한다”(6/17, 연합뉴스)
  - 북한인권단체 물망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귀환국군

- 용사회, 인간성회복추진운동협의회는 오는 25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0여 년간 국군포로를 불법으로 억류·감금하며 강제노역을 시켜온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계속되는 전쟁범죄자’로 ICC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들은 “북한의 국군포로 미송환과 강제노동 만행은 1949년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전쟁범죄”라며 “김정은은 이 범죄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 조장, 부추김을 통해 지속해온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ICC가 위치한 네덜란드 헤이그를 찾아 통지서한을 제출할 계획임.
- 유엔 미국대사 “북한 주민 8~12만 명 강제수용소에 수감”(6/17, 연합뉴스)
-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 인권문제가 전 세계 어떤 인권 위기 상황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17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파워 대사는 16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실상에 대해 증언했음.
  - 파워 대사는 “8~12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강제수용소에 수감돼 고문과 강간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이들은 부모의 처형 장면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하지만 “북한 정권의 조직적인 접근 차단 탓에 이런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파워 대사는 미국이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과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심층조사에 나선 것도 이런 현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작년 2월 발간된 위원회 보고서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정권에 의해 자행된 사실을 적시했다”며 “많은 사례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고 정권 최상층부가 수립한 정책에 따라 인권침해 행위가 이뤄졌다”고 분석했음.
  - 파워 대사는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유엔 안보리가 작년 12월 처음 북한 인권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증언을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음.

-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 23일 서울 개소(6/19, 미국의소리)
  - 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통은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개소식이 오는 23일 사무실이 입주하는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인권 피해자 등과의 지속적 만남과 자료 축적을 위해 현장 기반 조직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 데 따라 추진돼 왔음.
  - 이런 권고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직접적 인권 피해자인 탈북자들과 북한인권 운동을 하는 민간단체가 가장 많은 한국을 최적의 입지로 보고 그동안 한국 정부와 작업을 벌여 이번에 서울에 현장사무소를 열게 됐음.
  - 이 소식통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현장사무소장을 내정했고 5~6명의 직원 선발도 모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 이에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한국 정부는 지난달 현장사무소 설치를 위한 교환각서에 서명함으로써 법률적 절차를 마무리 지었음.
  - 이번 개소식에는 특히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전 세계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수장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이번 방한은 지난 2010년 나바네템 필레이 대표의 비공식 방한 이후 5년 만의 일임.
  - 또 다른 소식통은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인권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방한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며, 북한인권 문제가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된 현안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행보라고 말했다.
  - 자이드 대표는 개소식 다음날인 24일엔 연세대학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해 포괄적인 인권 문제를 주제로 강연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소식통은 개소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에 현장사무소 직원들은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한국에서 탈북자와 북한인권 민간단체들과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 활동 방향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 유엔, 북한 인권침해 '최전선'에서 북한인권 감시 착수(6/21, 연합뉴스)
  - 북한의 인권문제를 최전선에서 감시할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가 오는 23일

-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개소함.
- 북한인권 상황의 엄중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의미 있는 시작이라는 평가지만 국내 기관과의 업무 중복 등에 대한 우려도 있음.
  - 이번에 설치되는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무엇보다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을 위한 기구임.
  - 사무소의 이런 역할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1년간의 조사 활동을 정리해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 기반함.
  - 위원회는 당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反) 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며 책임 추궁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조직 설치를 제안했음.
  -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러한 권고 사항이 담긴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COI 권고가 인권이사회 차원의 법적 의무가 됐고, 우리 정부는 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 등과 협의를 진행했음.
  - 협의결과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현장기반조직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를 체결하고 사무소 설치를 위한 1차적인 법적 준비를 완료했음.
  - 교환각서는 사무소의 역할을 북한 인권상황 관찰 및 기록 강화, 책임규명 보장, 유관국 정부·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규정했음.
  - 각서에는 또 정부 당국이 ‘조직 공관의 안전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사무소가 주관하는 회의, 세미나, 교육과정, 심포지엄, 워크숍 참가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 등의 운영 조건도 포함됐음.
  - 즉 사무소는 국제적인 이슈가 된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최전선’인 남한에서 조사,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현장조직인 것임.
  - 나아가 유엔 산하의 조직인 만큼 사무소가 국내 북한인권 단체들과 국제 사회의 연결고리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3. 탈북자

- “탈북자들 유럽서 난민 인정 점점 어려워져”(6/16, 연합뉴스)
  - 탈북자들이 유럽에서 정착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했음.

-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는 ‘유럽 난민 정책과 탈북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 간 북한 망명자들이 유럽 국가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음.
-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영국은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 40건 가운데 30건을 거부했음.
- 2014년에는 23명이 난민 신청을 했으나 17명이 거절당했음.
- 거절된 비율 자체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체적으로 정착이 성사된 탈북자의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임.
- 네덜란드의 경우 2012년에는 29건 중 5건만이 거부됐으나 2013년에는 140건 중 128건이 거부당했음.
- 또 2013년 벨기에에서는 126건 중 99건이 거부됐고, 프랑스와 스웨덴에서는 각각 19건과 5건 모두가 거부됐음.
- 빌리 데이비스 EAHRNK 조사관은 “유럽 국가들의 탈북자들에 대한 판단이 현재 유연성과 경직성 사이에서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음.
- 그는 이어 “난민 관련 법률이 탈북자들에게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하며, 정부는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탈출한 북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폭넓은 인도주의적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음.
- 앞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로 위장해 난민 신청을 하는 '위장 난민'을 막고자 영국과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강화한 바 있음.

■ 유엔 “전 세계 탈북 난민 인정 1,282명”(6/18,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난민기구(UNHCR)의 바바 바로흐(Babar Baloch) 아시아담당 공보관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 세계에 난민지위를 받고 정착한 탈북자 수가 1천 282명이라고 설명했다.
- 유엔이 정한 세계난민의 날을 이틀 앞두고 이날 발표된 유엔난민기구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의 도움으로 난민지위를 받은 탈북자 수는 58명임.
- 바로흐 공보관은 탈북 난민이 정착한 나라 등 상세한 사항은 추후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그러나 유엔난민기구로부터 입수한 2014년 중반까지 통계에 따르면 영국에

- 정착한 탈북 난민의 수가 63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캐나다 127명, 독일 107명, 러시아 67명, 벨기에 즉 벨지끄 66명, 네덜란드 58명 순임.
- 한편, 지난해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탈북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전 세계 13개국에 1천 166명이었음.
  - 특히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적 난민은 500명이었고 대기자는 216명으로 약 720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보고서에는 한국 국적 탈북자 수가 1천 173명, 난민 지위 신청 후 대기하는 사람은 약 3천500명(3,489명)임.
  - 게다가 유엔 난민기구에 의해 무국적자로 규정된 사람이 200여 명(204명)에 달해 한국 국적 난민과 난민 신청자가 합계 약 4천900명(4,866명)임.
  - 특히 한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탈북 난민의 수가 가장 많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와 캐나다 등이 한국에 정착한 후에 다시 이들 국가에 난민 신청을 하는 이른바 ‘위장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학이나 이민 등 적법한 절차로 이주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 국적 난민 수의 증가가 주목됨.
  - 난민은 정치적 이유, 인종, 전쟁 등으로 인한 차별과 박해를 피해 자신의 국가를 탈출한 사람을 말함.
  - 탈북자는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수용소 수감과 고문 등의 박해를 당할 위험이 있어 국제법상 난민으로 규정돼 있음.

#### 4. 이산가족

- 특이사항 없음.

#### 5. 납북자

- “대통령님, 46년간 납북된 아버지 이름은 ‘황원’입니다” 황인철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납북자 신변인도 외면하는 통일부” 규탄(6/18, 데일리NK)
  - 황인철 ‘1969년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는 17일 서울 정부청사

- 후문에서 납북자 송환을 위해 통일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음.
- 황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간항공기 불법 납치행위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기소와 인도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통일부의 외면은)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라고 지적했음.
  - 그는 “아버지의 송환을 촉구하는 편지가 북한당국뿐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에게 보내지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는 부끄러워해야 하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음.
  - 한편, 1969년 12월, 2살 된 아들(황인철)을 둔 황원(당시 32세)씨는 출장을 위해 국내선 YS-11기에 탑승했다가 북한의 고정간첩 조창희에 의해 납북됐음.
  - 황원 씨는 북한당국에 집으로 보내줄 것을 강력히 항의했고, ‘가고파’ 노래를 부르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간 것으로 전해졌음.
  - 이후 함께 납북됐던 39명이 부분 송환됐지만 그를 포함한 11명은 돌아오지 못했음.
  - 당시 2살이었던 아들 황 대표는 지난 14년간 직장도 그만두고 아버지의 송환을 위해 동분서주해왔음.
  - 그러나 대한적십자사,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반(WGEID) 등을 통해 얻은 북한의 답변은 “남으로 돌아가지 않은 자들은 자의에 의해 북한에 머무는 것이며, 이들의 생사확인 불가능하다”, “강제실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WGEID가 다룰 인도주의적 사항이 아니다. 적대세력에 의한 정치적 음모” 등이었음.
  - 황 씨는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146개 국가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기의 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협약’,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286호 결의문, 제25차 유엔총회 제2645호 항공기 불법탈취 규탄결의문 등에 따라 한국 정부에 신변인도이행을 촉구했고, 통일부는 향후 해결노력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음.

## 6. 국군포로

- 특이사항 없음.

## 7. 대북지원

- 영 NGO, 텐트 400개 대북 지원(6/16,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의 민간 단체 쉘터박스(ShelterBox)는 지난해 가뭄의 피해에 더해 돌발 홍수로 피해를 입은 북한 수재민이 거처할 수 있는 텐트가 포함된 구호상자 총 400개를 지난 5월 분배했다고 전했다.
  - 지원 대상지역은 주로 함경남도의 형제산구와 락랑구였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 또 쉘터 박스는 텐트 외에도, 비식량 지원품에 해당되는 담요, 태양 전등, 정수여과기와 물통, 취사도구 등 생필품도 함께 제공했다고 밝혔다.
  - 쉘터 박스의 앤드루 애번스 국장은 지원물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분배되는 과정을 쉘터박스 직원들이 지원지역에 직접 가 감시했다고 덧붙였다.
  - 이번 지원으로 북한 수재민 약 1천2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지원은 영국을 포함해 유럽의 많은 국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부 받은 미화 30만달러로 이루어졌다.
  - 2000년부터 홍수와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당한 나라를 지원해 온 쉘터박스는 2007년 홍수 피해를 당한 북한 수재민에게 텐트가 포함된 구호상자 200개를 전달하며 대북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 캐나다 NGO, 북한에 메주콩 100t 지원...어린이 두유 제공(6/16, 자유아시아방송)
  - 캐나다의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지원할 두유(콩우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메주콩 100t을 지원했다.
  - 이 단체의 수잔 리치 대표는 4월 보낸 메주콩 100t이 지난달 말 북한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 퍼스트 스텝스는 이 메주콩으로 남포시와 형제산 구역, 강원도 내 23개 공장에서 두유를 생산하고 있다.
  - 생산된 두유는 강원도와 평안남도 내 200여 탁아소와 유치원, 소학교 어린이 10만여 명에게 매일 제공되고 있다.
  - 리치 대표는 앞서 지난 4월 28일부터 일주일 정도 북한을 방문했다며, 지원 물자가 제대로 도착해 어린이들에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 리치 대표는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가 점차 나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으며, 메주콩 40t을 추가로 북한에 보낼 것이라며, 현재 준비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 퍼스트 스텝스는 두유 외에 북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해 복합 미량영양소 ‘스프링클스’도 지원하고 있음.
  - 스프링클스는 영유아의 영양실조를 막고 성장을 촉진하며, 임산부의 태내 빈혈과 영양결핍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퍼스트 스텝스는 2001년 설립된 이후 지난 15년 동안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두유를 지원해 왔으며, 2006년부터는 ‘스프링클스’도 지원하고 있음.
- WFP ‘북한 가뭄 상황 주시…지원 준비돼 있어’(6/17, 미국의소리)
-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는 북한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도, 함경남도 일대에 가뭄 피해가 심각하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세계식량계획 로마본부의 조이 존스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가뭄으로 밀과 보리, 쌀 등 이모작 작물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상황이 악화되면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전체 곡물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가을 작황에 가뭄이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곡물 수확량이 감소할 경우 영양실조에 걸리는 어린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음.
  - 그러면서 앞으로 몇 주 간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 지난해 북한은 강수량이 평년 대비 61%에 불과해 100년 만에 가장 심각한 가뭄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는 모내기철인 지난달 강수량이 이보다 더 적은 평년 대비 57%에 그쳤음.
  - 한국 통일부는 가뭄이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진다면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지난해 보다 15~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음.
  -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이달 말 종료되는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할 계획임.
  - 존스 대변인은 관련 절차가 곧 확정될 것이라며, 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하는데 2천8백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계식량계획은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북한 8개 도 내 어린이와 임산부 18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하고 있음.
  -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사업에는 1억 3천70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17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55%인 7천500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임.

- 독일 NGO, 북한 청각 장애인에 '특수 자명종' 제조 기술 전수(6/17, 자유아시아방송)
  - 독일에 본부를 둔 대북 구호단체 '투게더-함흥'의 로버트 그룬드 대표는 북한 청각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용 알람시계 제조 기술을 전수했다고 말했다.
  - 세계농아인연맹(WFD)의 북한 연락관이기도 한 그룬드 대표는 독일의 전자업체인 APE(Angewandte Physik und Elektronk GmbH)사 직원이 지난 5월 28일부터 열흘 간 방북해 청각 장애인 20여 명에게 기술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 이번 방북에는 독일 의원들과 언론인, 단체 후원자 등 10여 명이 동행해 청각 장애인들이 기술을 배우는 모습을 지켜봤음.
  - 그룬드 대표는 청각 장애인 자신들 뿐 아니라 부모들도 자녀들이 스스로 장애인용 알람시계를 만들 수 있게 돼 굉장히 뿌듯해 하고 자랑스러워 했다고 말했다.
  - 청각 장애인용 알람시계는 정해진 시각에 소리 대신 반짝이는 움직임으로 시간을 알려줌.
  - 청각 장애인인 그룬드 대표는 일반인들을 위한 생활용품이 청각 장애인들에게는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알람시계가 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특수 제작된 알람시계가 필요하지만 북한에서는 구할 수가 없고, 대부분 이런 시계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임.
  - 그룬드 대표는 북한 청각 장애인들에게 기술을 전수한 APE사 직원도 청각 장애인이라며,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기술을 전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APE사는 북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특수 알람시계 100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과 장치를 기부했음.
  - 그룬드 대표는 이번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일반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북한 내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확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이 사업을 통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청각 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해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북한에는 약 35만 명의 농아인들이 등록돼 있으며, 평양에만 2만 명의 농아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2008년 설립된 투게더-함흥은 청각 장애인 뿐 아니라 시각 장애인들의 교육과 취업도 지원하고 있음.

- 유엔 “북 마른논 25%, 지원 연장”(6/19, 자유아시아방송)
  - 식량농업기구는 가뭄의 영향으로 올해 가을 북한의 쌀 수확이 지난해보다 약 12%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음.
  - 식량농업기구의 북한 관련 최신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피에로 콘포르티 분석관은 지난 8일 현재 물이 부족해서 모내기를 하지 못한 논 면적이 약 13만6천 헥타르로 파악된다면서 전체 북한 논면적 약54만 4천 헥타르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 콘포르티 분석관은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도, 함경남도 일대에 가뭄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이어지던 북한의 쌀 수확 증가세가 올해는 꺾일 수 있다고 전망했음.
  - 지금의 기상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쌀 수확 추정치는 약 230만 톤으로 2014년의 약260만 톤보다 12% 줄 것으로 내다봤음.
  - 한국의 민간연구소 지에스엔제이(GS&J)인스티튜트 권태진 북한동북아연구원은 봄 가뭄의 악영향으로 북한의 곡물 생산이 약 10% 줄 수 있다고 전망했음.
  -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이달로 종료할 예정이던 북한의 8개도와 남포시에 지원 중인 북한 주민에 대한 영양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할 계획임.

## 8. 북한동향

- 北, 각지 농촌들에서 심한 가뭄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6.16,중앙통신)
  - 8일까지의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44만1,560여 정보의 모내기를 한 논에서 13만6,200여 정보의 벼모들이 말라가고 있음.
  - 피해가 큰 지역은 곡창지대인 황해남북(80%와 58%가 마른상태)도와 평안남도 및 함경남도임.
  - 해당 지역들에서는 다른 작물을 심는 등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음.
- 北 각급 병원들과 치료예방기관들, 농촌들에서 현장치료대활동 전개(6.16,중앙통신)
- 「2015년 국내(北)장애자의 날」연환모임(체육유희활동·공연 등), 6월 18일 평양에서 강하국

(보건상) 등 참석한 가운데 진행(6.18,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